

2013. 2. 5.

보도자료

이 자료는 2월 5일(화) 10:00 배포시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KDI 홍보팀

TEL 02) 958-4030 FAX 02) 960-0652 E-mail press@kdi.re.kr

이 자료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출입기자단에 동시 배포 됩니다.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KDI-OECD Joint Conference on
Korea's Social Policy Challenges

- 일 시: 2013년 2월 5일(화) 10:00~18:00
- 장 소: 롯데호텔 에메랄드룸(2층)
- 주 관: KDI · OECD

□ KDI는 OECD와 공동으로 2월 5일,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제하의 『KDI-OECD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 '한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함.

○ OECD는 2011년 『한국의 사회정책 보고서(Social Policy Brochure, SPB)』를 발간한 바 있으며, KDI와 OECD는 이의 후속작업으로서 지난 1년간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선결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

□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노동시장 정책 과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및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제하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각 분야별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정책을 점검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대안을 모색함.
- 컨퍼런스 논의 결과는 조화로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컨퍼런스에는 양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오석 KDI 원장,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김용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등 KDI와 OECD의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

❖ 문의: 김용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02-958-4071)
차병섭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전문연구원(02-958-4683)

❖ 첨부1. 프로그램

❖ 첨부2. 발표 요약

❖ 첨부1.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09:30~10:00	등 록
10:00~10:30	개회식 개회사 현오석 KDI 원장 호세 앙헬 구리아 트레비노 OECD 사무총장 축 사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
10:30~11:00	세션 1.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사 회 김주훈 KDI 부원장 발 표 1. 한국의 사회통합 재고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 랜달 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토 론 김용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11:00~12:10	세션 2.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사 회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 장관 발 표 2.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의 함의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 발 표 3.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세와 주요 현안 과제 최경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토 론 박능후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 연구위원
12:10~13:40	오 찬
13:40~14:50	세션 3. 노동시장 정책 과제 사 회 남성일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 표 4.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 폴 스와임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 발 표 5.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발 표 6. 외국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연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토 론 최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시 간	일 정
15:00~16:10	<p>세션 4.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ECEC)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사회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p> <p>발 표 7. 영유아, 여성 및 사회 전반의 통합을 위한 ECEC 정책방안 미호 타구마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p> <p>발 표 8.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토 론 김정호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권지영 교육과학기술부 유아교육과 사무관</p>
16:10~17:20	<p>세션 5.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사회 강대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p> <p>발 표 9. 병원 중심 의료로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로 마크 피어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보건의료분과 담당관</p> <p>발 표 10.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p> <p>토 론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성창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팀장</p>
17:20~17:40	<p>마무리 제언 스테파노 스카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국 부국장 김용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p>

세션1. 한국의 주요 사회정책 과제

Enhancing Social Cohesion in Korea: overview and main findings 한국의 사회통합 재고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
랜달존스 OECD 경제국 한국담당관

-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저출산화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기술진보, 일인가구의 증가, 고임금의 정규직과 저임금의 비정규직 간의 노동시장 양극화 및 서비스산업 부문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합리적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및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할 필요
 -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리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신중하게 시행
 - 조세와 공적이전 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

○ 공공부문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은 경제에 미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여타 분야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며,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

-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

세션2. 소득분배와 복지제도 개선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mong the Working-Age Population and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ies

생산가능인구의 소득분배 및 빈곤과 사회복지정책의 함의

린다 리차드슨 OECD 고용노동사회국 경제학자

- 한국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키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됨.
 - 한국의 조세, 공적이전제도가 소득재분배 및 빈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함.
 - 따라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고 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BLSP), 고용보험제도(EI), 근로장려세제(EITC) 등 사회안전망의 세 가지 주요 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빈곤의 위험에 처한 가구가 사회안전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사회안전망 내 근로유인 강화 기제를 마련하고, 특히 근로능력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수행 필요

Korea' s Income Inequality: the Trend and Major Issues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세와 주요 현안 과제

최경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1992년부터 2009년 사이에 한국의 소득불평등도는 크게 확대됨.

-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이전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측면도 있으나, 시장소득 불평등 확대가 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시장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소득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확대추세가 멈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불평등 확대 추세는 중위-하위 격차가 중위-상위 격차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데 기인함.

- 1990년대 초반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으나, 2009년에는 중위-상위격차가 1.9로 소폭 증가된 데 그친 반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확대됨.
- 특히 하위 10%는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질소득의 상승을 거의 경험하지 못한 반면, 상위 10%의 실질소득은 30% 증가를 보임.

□ 사업체의 대형화로 인한 자영업 위축은 가계소득에서 사업소득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됨.

- 가구주 사업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2008년에는 사업소득의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저소득층의 자영업 종사 비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은 저소득층의 임금근로자 전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

- 영세업체의 쇠퇴는 해외에서도 일어난 추세적인 현상이나, 경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구조조정의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의 효율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에서는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소득의 형평성을 위해서 바람직할 수 있음.
 - 생산에 비해 노동투입이 높은 부문은 어느 경제에나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분배 강화를 위해서는 효율성 저해 효과를 떠나 많은 노동이 소요되는 부문을 유지시킬 필요 있음.

- 노동시장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나, 상품시장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을 추진했으나 동시에 진행된 상품시장 개혁에는 실패함으로써 근로자 지위가 하락, 소득분배가 악화된 바 있음.

-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 등 지식경제 기반을 강화해, 교역조건 악화를 방지할 필요 있음.

세션3. 노동시장 정책 과제

Policies to Tackle Labour Market Duality in Korea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고용노동사회국 참사관
폴 스와임 OECD 고용노동사회국 수석경제학자

-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은 사회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임.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심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근로소득의 불평등과 차별 및 고용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비정규직 축소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
 -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축소는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형평성 개선에 도움
-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비율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세심한 노동시장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 완화와 비정규직의 일자리 안정성 제고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고용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필요 있음.

○ 노동시장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시킬 필요

- 상당수 비정규직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 퇴직금 제도를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토록 하기 위해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퇴직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할 필요 있음.
- 한편, 근로감독, 사회보장 및 세무행정 연계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필요

Improving Employability of the Marginal Groups in the Korean Labor market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촉진

황수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1970~80년대 경제개발 및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한국의 고용관행은, 2000년대 이후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움.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발전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기 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음.
 - 소수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과다경쟁이 발생, 취업준비기간이 장기화되고 '스펙 쌓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구조적 대응과 경력을 중시하는 채용관행 확립과 같은 방향 전환이 필요함.
- 한국의 여성고용정책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을 맞춰 왔으나, 장시간 근로환경이 지속되는 한 여성의 과소고용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우며 출산율을 제고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출산휴가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단시간 근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노동시장에서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25~54세 인력 감소와 202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음.
- 인구구조 고령화 속에서 노동시장 내 증가한 고령자들의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낮게 설정된 현재의 정년제도 개편,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 및 근무형태 마련이 요구됨.

Policies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ssues and challenges

외국인력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연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이규용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특히 2004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기인함.
 - 과거에 비해 유형과 출신국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특히 한국계 중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
 - 2004년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라 비전문인력을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게 되었으며,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의 특례 조항인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음.
-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와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됨.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및 외국인력의 정주화 가능성
 - 외국인력 활용의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로 외국인력 도입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
 - 동포인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적 접근과 동포포용적 접근 간 입장 차이로 종합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인력 도입제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음.
 - 인력부족의 근본원인을 파악해 적절히 대응하고, 내국인 구인 노력 제도를 내실화할 필요

- 정주는 선별적으로 허용하되 불법체류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필요
- 합리적인 동포정책 방향 설정 및 동포들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정책 마련
-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도입과 정책지원체계 수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 설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

- 산업구조조정 및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외국 인력 도입정책을 수립해야 함.

세션4. 영·유아 보육 및 교육제도(ECEC)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Combine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Measures to Ensure Social Cohesion

영유아, 여성 및 사회 전반의 통합을 위한 ECEC 정책방안

미호 타구마 OECD 교육국 수석정책분석가

-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영·유아 교육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첫째, 취약계층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
 - 둘째, 일-가정 양립 정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 및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 셋째,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 부문의 책무성 강화
- 출산과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공공지출을 확대할 필요 있음.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 서비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함.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3~5세 대상 공동교육과정을 대등한 수준으로 시행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0~2세 과정은 3~5세 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함.
 -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기준과 규제를 적용할 필요 있음.

□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인증제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

-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나은 공급자를 선택하고 결정케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인증제도와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의 서비스 질을 담보

Korean Child Care Policy: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한국 보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김인경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한국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발달을 증진시키고, 여성 경제 활동의 연속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
 - 인구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규인력을 양성하고, 여성 노동력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음.

- 현재 한국의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
 - 장시간의 시설 보육이 불필요한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게도 종일제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선별적 조기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자원 투입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계층 간 교육격차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남.
 -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낮은 저소득·저학력 여성이 양육수당을 선택해 유아 발달에 필요한 학습자극을 가정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계층 간 학업역량 차이가 심화될 가능성 존재
 -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나, 보육수요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해 기존 시설의 아동 수를 일정 수준 보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이 비용 절감과 서비스 질을 개선할 유인이 낮음.

□ 보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여성과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양적규제를 폐지하고 질적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한해 인가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강화할 필요 있음.

- 소득에 따라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차등지원 하되, 비근로 여성의 영유아에게는 보육료 지원을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단축
- 보편적인 지원보다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통합적 조기 지원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한편,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영아에 한정
- 어린이집 정보공개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인가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시설 간 경쟁을 유도, 보육비용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을 촉진
- 이를 통해 근로여성의 보육료 부담이 완화된고 우수한 어린이집이 확대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가 용이해짐에 따라 출산의 기회비용이 하락하면서 출산기피현상이 완화될 수 있음.

세션5.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 정책 방향

Moving from Hospitals to Primary Care for Chronic Disease 병원 중심 의료로부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로

마크 피어슨 OECD 고용노동국 보건의료분과 담당관

- 한국 의료비용 수준의 증가는 보다 많은 진료와 고비용 서비스를 유도하는 진료비 지불체계에 의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전체 의료시스템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압도적인 비중과 OECD 국가 중 최상위에 속하는 불필요한 입원율은 일차의료 체계가 취약한 현실을 반영
 - 만성질환을 지닌 고령자들의 건강관리를 돕는 일차의료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일차의료를 보다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양질의 일차의료에 대한 접근성 개선은 의료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 일차의료 강화는 불필요한 입원율을 낮춤으로써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
 -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 복수전문과를 갖춘 집단개원(multi-speciality group practice)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복수전문과를 갖춘 집단개원은 협력과 연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

- 또한 한국에서 심각하게 문제시 되고 있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치료 분야로 쉽게 확장·적용될 수 있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예방적 상담서비스 및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진료비 상환을 조정을 통해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위별 수가제(pay for performance scheme)를 고려할 수 있음.
- 의과대학에 복수전문과를 갖춘 일차의료센터(polyclinics)의 설립을 허용하고, 일차의료를 위한 인력양성소로 활용

Primary Care in Korea: The Road Ahead

한국 일차의료 발전방향의 모색

윤희숙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 급속한 고령화에도 한국의 일차의료는 여전히 낙후된 상황으로, 만성질환의 관리 정도가 낮고, 의료서비스 시장을 모니터하고 정보를 취합하는 정책인프라도 미흡한 실정
 - 정부 수립 시 전문의 중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첨단기술과 고가장비, 대형병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고착되어 일차의료 발전이 어려웠으며, 이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미흡
 - 대표적인 고령화 질환인 고혈압·당뇨 유병자 수는 현재 1,000만이 넘었고, 2040년에는 30세 이상 유병률이 46.9%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나, 적정수준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비율은 현재 고혈압 43.3%, 당뇨 29.7%에 불과해 합병증과 고액 의료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무증상 인구에 대한 초음파 검사 확대로 갑상선암 수술이 최근 10년 동안 9배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 과다제공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심각하게 나타남.
- 자원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고 일차医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특정 모델을 확정하기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국민들이 기존 의료서비스 공급행태의 문제점과 개혁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 각국의 개혁 사례는 국민들의 반대나 무관심이 이해관계자의 반대 속에 개혁을 실패토록 하는 주원인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에서의 정책실패를 통해서도 유인구조를 활용한 비강제적인 방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새로운 모델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그 우수성을 경험한 국민에게 선택받는 것이 중요함.
- 공공부문에서는 예방, 상담, 교육, 관리를 통합해 보수와 연동하고, 복수진료과목 간의 협진과 공동개원, 서비스 표준 프로토콜 마련 등 새로운 모델 적용을 주도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서는 보조금이나 규제완화가 필요함.

❖ **첨부3. 프레스 컨퍼런스 관련**

일 시: 2013. 2. 5(화) 11:00~12:00

장 소: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주요 참석자: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KDI 현오석 원장

진행 순서

시 간	일 정
11:00~11:02('2)	사회자 인사말
11:02~11:07('5)	현오석 KDI 원장 모두 발언
11:07~11:22('15)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제언』 보고서 소개
11:22~12:00('38)	Q&A

※ 동시 통역 제공